

‘2년 차 징크스’ 우려를 불식시킨 고향사랑 기부제

전영준 부연구위원

주요내용

- 전년도 모금실적을 크게 넘어선 2024년도
고향사랑 기부제
운영 결과
 -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,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총 77만여 건의 기부를 통해 9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유치하였음
 - 전체 기부 건수와 모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였던 2023년(기부 건수: 약 53만 건, 모금액: 약 650억 원) 대비 각각 47% 및 35% 이상 늘어난 것임
 - 특히,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가 크게 증가한 양상을 통해(‘23년: 510,490건 → ’24년: 759,313건),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현저히 제고된 사실을 알 수 있음
- 지방재정 확충과
지역균형발전 달성에
일정 부분 기여
 - 2024년 비수도권 지자체(174개)의 평균 모금액(약 4.5억 원)은 수도권 지자체(69개)의 평균 모금액(약 1.4억 원)보다 3.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, 인구감소지역(89개)의 평균 모금액(약 4.7억 원)은 비인구감소지역(137개)의 평균 모금액(약 2.7억 원)보다 1.7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됨
 - 이 밖에,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0% 미만인 지자체(153개)의 평균 모금액은 약 4.1억 원으로서, 이는 2023년의 해당 금액(140개 지자체 평균) 대비 약 23% 증가한 규모임
- 해외(일본)
성공사례와도 견줄 만한
제도 2년 차 모금실적
 -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제(ふるさと納税)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, 제도 시행 2년 차였던 2009년의 총 모금액(약 77억 엔)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5% 이상 줄어든 양상을 나타냄
 - 이에 반해,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였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의 총 모금액은 전년도보다 약 35%나 증가하였음
 - 또한, 그 금액의 절대적인 규모(약 879억 원)도 일본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큰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
- 시사점
 - (추가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) 향후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로 한정된 100%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을 점차 확대해야 하며,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함
 - (지나친 조급함 지양) 일본의 것과 비교할 경우,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총 모금액은 절대 적은 수준이 아님에 따라, 그 정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본의 사례를 조급하게 수용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함

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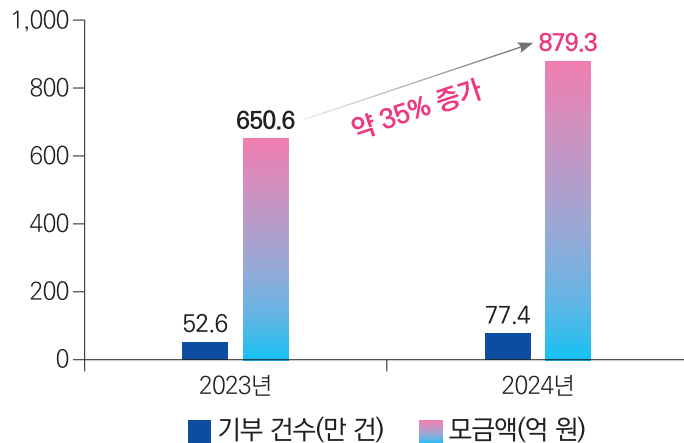
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



전년도 모금실적을 크게 넘어선 모습 발생

- 지난 1월 2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,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총 77만 4천여 건의 기부를 통해 9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유치하였음
- 이러한 전체 기부 건수와 모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였던 2023년(기부 건수: 약 52만 6천 건, 모금액: 약 650억 6천만 원) 대비 각각 47% 및 35% 이상 늘어난 것으로, 소위 '2년차 징크스'를 어렵지 않게 극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¹⁾

〈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 〉



- 광역(본청+기초) 단위별로 모금액을 살펴보면, 전남(약 188억 원), 경북(약 104억 원), 전북(약 93억 원) 순으로 가장 많았고, 2023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(317%), 광주(299%), 세종(206%)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
- 또한,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군(郡) 지역은 평균 약 4억 7천만 원('23년의 124% 수준)을 모금하였고, 시(市) 지역에서는 평균 약 3억 8천만 원('23년의 130% 수준)을 거두었으며, 자치구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 7천만 원('23년의 180% 수준)을 나타냄
- 특히, 전남 무안군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이후 단 이틀 만에 2023년도 모금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기부금이 모인바, 특정 지역을 위로·응원하는 수단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치가 입증되었음



결과 발생의 주요 요인

- 이처럼 전년도 실적을 크게 상회한 전국 지자체의 2024년 제도 운영 결과는, 당해 지역 출신의 기업인 또는 유명인 등이 주로 행하는 1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가 줄어들었으나('23년: 6,993건 → '24년: 5,153건),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('23년: 510,490건 → '24년: 759,313건)
-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현저히 제고된 사실을 알 수 있음

1) '소포모어 징크스(sophomore jinx)'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'2년 차 징크스'는 보통 첫 번째 결과물에 비해 두 번째 결과물의 내용이 나쁜 경향을 뜻하는 것으로, 2년 차 또는 두 번째 기회에서 최초보다 부진한 실적을 거두거나 처음만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가리킴

〈 기부 금액별 건수 〉

구 분	합 계	1만원 미만	1만원~10만원 미만	10만원	10만원~100만원 미만	100만원~500만원 미만	500만원
'24년 건수	773,711	9,033	40,984	709,296	9,245	3,709	1,444
비율(%)	100	1.17	5.30	91.67	1.19	0.48	0.19
'23년 건수	526,305	39,572	29,627	441,291	8,882	4,881	2,052
비율(%)	100	7.52	5.63	83.85	1.69	0.93	0.39

자료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5.01.22.)

02

제도 운영 결과의 상세 비교

지역 유형별 지방재정 확충 규모²⁾

- 전체 지자체를 비수도권(174개)과 수도권(69개)으로 구분할 경우, 2024년 비수도권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4억 5천 만 원('23년의 136% 수준)으로 이는 수도권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인 약 1억 4천만 원보다 3.2배 이상 큰 규모임

〈 비수도권·수도권 지역 모금실적 〉

(억 원, 건)

구 분	2024년		2023년	
	비수도권 지자체(174개)	수도권 지자체(69개)	비수도권 지자체(174개)	수도권 지자체(69개)
평균 모금액	4.5	1.4	3.3	1.0
평균 기부건수	3,897	1,385	2,582	1,116

자료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5.01.22.)

- 아울러, 전국 기초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(89개)과 비인구감소지역(137개)으로 나눌 경우, 2024년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4억 7천만 원('23년의 124% 수준)에 해당하는바, 이는 비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인 약 2억 7천만 원보다 1.7배 이상 많음

〈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 모금현황 〉

(억 원, 건)

구 분	2024년		2023년	
	인구감소지역(89개)	비인구감소지역(137개)	인구감소지역(89개)	비인구감소지역(137개)
평균 모금액	4.7	2.7	3.8	1.9
평균 기부건수	3,771	2,563	2,754	1,700

자료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5.01.22.)

2)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모금액은 개별 지자체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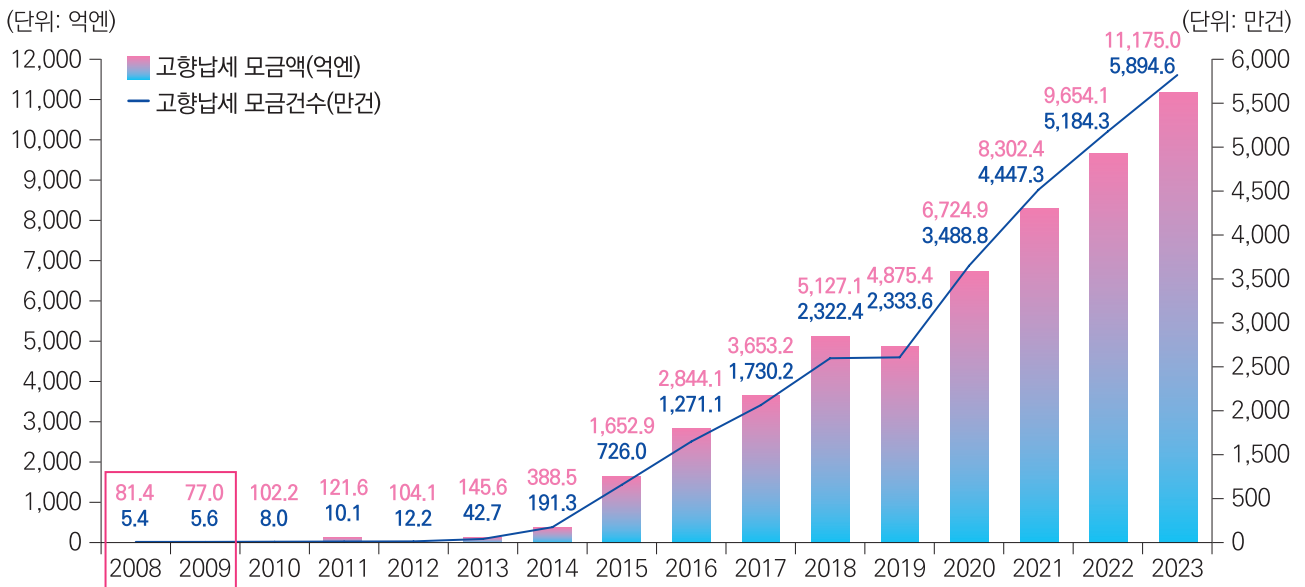
- 이 밖에,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0% 미만인 지자체(153개)의 평균 모금액은 약 4억 1천만 원으로, 이는 2023년의 해당 금액(140개 지자체 평균) 대비 약 23% 증가한 규모임
- 이상의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재정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



해외 성공사례와의 비교

- 일본은 2008년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(ふるさと納税)를 도입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켜 나가고 있음
-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도 시행 첫해에 약 81억 엔(한화 약 800억 원)을 모금하였고, 16년이 경과한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이보다 130배 이상 증가한 약 1조 1,175억 엔(한화 약 10조 3천억 원)을 거둬들임으로써,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톡톡히 발생함
- 그럼에도, 일본 고향납세제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저조한 성장세를 보인바, 그 시행 2년 차였던 2009년의 총 모금액(약 77억 엔)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든 모습('08년의 95% 수준)을 나타내었으며, 제도 시행 5년 차였던 2012년의 총 모금액(약 104억 엔) 역시 제도 시행 첫해의 해당 금액 대비 약 28% 늘어나는 데에 머물렀음

〈일본의 고향납세제 운영 결과〉



자료: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현황조사 결과(2024년 8월 2일 기준)

- 이에 반해,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에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거둬들인 총 모금액은 전년도보다 약 35%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, 그 금액의 절대적인 규모(약 879억 3천만 원)도 일본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

03

시사점



추가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

- 앞서 살펴보았듯이,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더 많은 재정수입이 발생한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를 통해, 해당 제도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역균형발전 달성에 일정 부분 이바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
- 또한, 2023년의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밝힌 전영준·홍근석(2024)의 연구에 비추어봤을 때, 2024년 한 해 동안의 제도 운영 결과 역시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일부 감소시켰을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, 향후 이러한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
- 특히, 현재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로 한정된 100%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을 점차 20만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개인들의 추가적인 기부를 유도해야 함
- 이때, “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”라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층 원활히 달성하려면,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, 이들 지역으로의 기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



지나친 조급함 지양

-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와 이보다 15년 앞서 시행된 일본 고향납세제의 운영 결과를 단순 비교하며,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모금실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
- 이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본의 사례를 절대적으로 수용하자는 요구 역시 실재함
- 다만, 제도 시행 2년 차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,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총 모금액은 절대 적은 수준이 아닌(바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임), 지나친 조급함으로 인해 자칫 현재의 성장세를 저해하는 우(愚)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

참고문헌

- 전영준·홍근석(2024)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: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. 지방행정연구. 38(3): 199-228.
-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5.01.22.) “고향사랑의 마음,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지자체로 세 배 넘게 모였다”

내용문의

-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(033-769-9891, jjy16@krila.re.kr)

